

News

어디까지 적용하나…'대출 전선' 은행도 헛갈리는 6·17 대책

연합뉴스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시중은행에서 조차 혼란이 이어져…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하다 보니 대출 담당자 조차 판단에 어려움…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금융당국과 협의에 착수

투자처 못 찾은 돈…통장 잔액 한달새 30조 폭증

이데일리

2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잔액(실세요구불예금 포함)은 758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9조9,000억원 급증

수시입출식 예금은 보통 성과급 지급이 많은 연말이나 연초에 소폭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5월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이례적

저금리·코로나19에 잘나가던 車대출 시장마저 주춤

데일리안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5월 말 오토론 잔액은 4조9,769억원으로 1년 전(5조7,147억원)과 비교해 13.0%나 급감

지난해 테마검사로 은행의 오토론을 꼽으면서 감소세로 전환… 이후 경기부진, 저금리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하반기에도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지속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한 보험사에 과태료 다시 추진

연합뉴스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 다시 추진…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하면 고객에게 이득보다 손해…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어

금융당국의 초강수, 한화생명 수천억 손실 현실화하나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3년 IFRS17 시행 전까지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 하는 제도인 부채적정성평가(LAT)의 할인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화생명, 신용등급 하향 등으로 외부 자본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금리 인하와 LAT 기준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타격이 불가피…

정부,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조정안 25일 발표

연합뉴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

다만 추후 당정 협의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주에는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큰 틀에서 공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 공개

네이버, '통장'에 이어 '대출'까지…중금리대출 시장 박ter진다

뉴스투데이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에 나설 방침

활용할 비금융거래정보는 네이버페이 판매현황·품목·반품률·쇼핑등급 등… 판매실적이나 네이버쇼핑 등급이 높고 반품률이 낮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져

비트코인에 세금 부과…'금융 제도권' 관리 받나

데일리안

24일 금융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과세방안을 검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

이미 지난 3월 국회에서 암호화폐 등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가상화폐 거래 차익 등을 짜막 가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주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